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1월24일(월)
통권1호(제1권 제17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위기의 개성공단, 남북 당국의 진정성 있는 실천만이 유일한 해결책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색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여
기까지 왔다.

11월 24일 북한은 12월 1일부터 관리위원회 직원 50%
및 입주업체 상주 인원 중 최소 필요 인원을 제외한 인
원의 철수,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북한이 군사분계선의 육
로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 차단하겠다고 했을 때 예상했
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그만큼 사전 경고
를 정부가 의도적 무시로 일관한 것에 대해 북한이 가중
조치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날의 조치가 1단계라고 함은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없을 때는 더욱 심한 압박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예컨대 입주기업 전면 철수와 개성공단 폐쇄가
그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치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
던 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며, 진정성을 보일 것
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요
구를 협박전술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정부의 기조는 ‘할
테면 해 봐라’였다. 이에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남북의 힘겨루기 속에 개성공단까지 직격탄을 맞
게 됐다.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가?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예정된 1단계가 마무리되는 2010년 생산유발 효과
가 47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
인 ‘남북의 귀중한 공공재’이다.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
에게는 유일한 활로이며, 이런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범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5천억 원 이상의 직접적
인 투자 손실 이외에도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시장 퇴
출 등 예측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이른바 코리아리스크를 촉발하여
국가신인도 하락 및 국제외환 조달 금리 상승, 외국
인 투자 감소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에서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악재
일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북한 투자

를 고려하는 외국인에게 대북투자의 교훈과 경험을 제공
하는 ‘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이 비경제
적인 이유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사활의 기로에 서 있는 개성공단을 살리려면 우선 북
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
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지어 대만이 독립을 하겠다
고 나섰을 때도 중국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 속에 대
만의 투자 활동을 보장했다. 아니 오히려 외국 기업에 우
선해 대만 동포의 투자를 보호했다. 중국은 이렇게 해서
대만의 투자자들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에게도 이른바 시
장의 신뢰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중국을 만든
기반이 되었다. 중국이 그러했듯 북한 역시 좀 더 긴 안
목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더욱 철저해야 할 시점이다.
오히려 북한은 개성공단을 닫는 수세적 방식보다 남한
동포의 투자를 보호, 보장하는 법률 제정 등의 공세적 방
식이 지금 더욱 효과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입주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입주기업과 개
성공단은 함께 죽고 사는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입주기업은 당사자로서 의도적 무시로 사태를 키우고
있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도록 더
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역시 문제 해결의 관건은 정부에게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우선 문제의 단초가 된 전단 살포는 민족 구성원 모두
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설명
하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
러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도 야당의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신 기자재 제공, 숙소 건립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
치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
한 조치 역시 당국끼리 어렵다면 현대 아산을 통해서라
도 추진해야 한다. 식량 등 인도적 지원도 형식과 명분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진정
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제17호 목 차

이주의 칼럼

시험대에 오른 남북관계의 위기관리 능력, 대화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2

이주의 주요 기사

정부, 개성공단 기반시설 사업비 69억원 증액 -----	3
정부, 대북 유화 제스처...북한 호응은 '미지수' -----	4
남북관계-양안관계 발전 속도 '역전' -----	5
대북 정책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	6
정부, 대북 뼈아픈 대응수위 높여 -----	7
"제발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나 했으면" -----	8
조용기 "MB, 대북 강경정책 당장 바뀌라" -----	9
<종합>北, "개성공단 축소·개성관광 중단·남북 철도 중단" -----	10
Latest Threats May Mean North Korea Wants to Talk -----	11
北朝鮮制裁を半年延長 国会で承認 -----	11
추천논문 / 대북 농업개발협력 정책 방향 -----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민화협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초청강연

▶주제 : 한미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07:10

▶장소 :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현대한국연구소 제13차 연구소 세미나

▶주제 : 한국 민주화의 두 가지 장애 :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16:00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중관 1층 회의실

●평화재단 제28차 국제포럼

▶주제 :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일 통일 전후의 경험

▶일시 : 2008년 11월 26(수) 14:00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 판매전

▶주제 : 개성공단 상품 판매 및 현안문제 토론회

▶일시 : 2008년 11월 27(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이 주의 칼럼

시험대에 오른 남북관계의 위기관리 능력, 대화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정은미(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군사분계선의 일부가 개방되고 50년 묵은 지뢰가 제거되고 인근 북측 군부대가 후방으로 배치되었다. 이처럼 남북경협사업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군사적 영역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또 다른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첫 삽을 뜬지도 5년이 되었다.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의 만남은 단순히 양측의 경제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 통일 기반의 하나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본보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조건인 3통문제(통행·통관·통신)는 지난해 10월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해놓고도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종이 위에 잉크로 말라붙어 있다. 가동 중인 기업들의 생산속도에 북측의 노동력 제공이 따라가지 못해 입주한 기업체들은 제때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11월 12일 북측당국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는 강경조치를 밝혔다. 만일 북측이 시한부로 설정한 12월 1일 이전까지 우리 정부의 적절한 호응이 없다면 아마도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남측의 기업체 및 개성관광 관련 업체들이 당장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변화한 한반도 정세와 뒤떨어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가 관건이다. 리 정부는 어쩌면 북측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장기간의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현재는 남북관계의 일시적·과도기적 조정기라고 한다. 그러나 가뜰이나 고환율, 고금리, 고실업률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러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수개월 아니면 그 이상의 긴 겨울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북측의 시선으로 보기에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갖하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뼈아픈 살포를 방관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급변상태 대책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유엔 북측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등 북측의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2단계 사업으로의 확대는커녕 1단계 시범사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측은 불만이 크다.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시가 아닌 대화를 위한 여건을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어느 정권에서나 긴장과 대화 사이의 줄타기가 있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역행이라는 상존하는 남북 간의 위기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과연 해당 정부에 있는가에 좌우되었다. 다시 한번 남북관계에서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아무쪼록 지혜를 모아 추운 겨울 얼어붙은 경제 불황 속에서 남북관계에서나마 훈풍이 불어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의 전문은 http://tongil.snu.ac.kr/tboard/view.php?id=05_07&no=3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10주년...피격사건 후 금강산 관광 중단
경제적 손실 '눈덩이'

-- 11월 18일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이 18일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98년 첫 관광객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195만 여명.

특히 2003년 9월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은 꾸준히 늘었고 올 3월부터는 직접 자동차를 몰고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금강산 관광은 지난 10년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지금 금강산은 남북경색과 대치의 현 주소를 반영하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높고 험한 산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다.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키고 북측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맞섰다.

하지만 북측은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조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북안'이 있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쳤으며 북측은 오히려 남측 당국자들을 추방하고 나서면서 남북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 결과 금강산 관광은 4개월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대아산은 지금까지 8백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남측의 경제적 손실이 1천억원에 이르고 북측 역시 1천126만 달러(약15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남북협력기금 103억원 집행 의결

-- 11월 18일 연합뉴스

정부는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사업 지원 등 5건의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3억여원을 사용키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10~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김하중 통일부 장관) 서면회의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검진센터 건립사업 등 민간단체들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8억원 상당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내 폐기물 소각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를 63억원 증액하는 한편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에 남북협력기금 9억원을 사용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한 북한백신지

원사업에 49만3천달러(약 7억100여만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관리에 7억7천3백만원을 각각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북한 조선화보사 새해 달력 발행

-- 11월 18일 노컷뉴스

북한의 조선화보사가 2009년도판 달력을 발행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북한 조선화보사가 발행한 달력(사진=조선신보)

조종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8일 “선화보사가 발행한 달력은 북한의 이름난 명승지와 도시, 유적 등의 풍경을 위주로 1월에는 올밀대의 설경을, 2월에는 2월의 백두산천지를 편집했다” 말했다. 이 밖에도 모란봉과 구월산, 금강산의 자연풍경, 대동강반에서 문화정서생활을 즐기는 근로자 등 도시풍경 그리고 묘향산 보현사의 만세루와 4각9층탑 등 역사유적 풍경을 소개하고 있다.

신년달력 표지에는 곰산에서 본 백두산의 가을풍경을 바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새기고 그밑에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체98(2009)’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신년달력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도 각각 번역 출판됐다고 소개했다.

정부, 개성공단 기반시설 사업비 69억원 증액

-- 11월 18일 뉴시스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사업비를 63억원 증액하고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을 위해 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는 지난 10일~1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사업비 증액’ 및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지원안’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내 폐기물 소각장 소각 방식 변경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당초 1510억원에서 1573억원으로 63억원 증액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대다수(78%)를 차지하는 20대~30대 여성 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탁아소를 건립하는데 드는 9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남북나눔 주관)과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검진센터 건립사업(나눔인터네셔널 주관) 등 2개 분야 합동사업에 18억원 상당을 기금에서 지원키

로 결정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위해 7억7300만원 상당을 지원, 동절기 및 최소 유지관리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동해선 공용야드 건설사업이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기간은 지난해까지였던 것을 내년까지로 연장했고, 사업비는 4억8977만원에서 4억7689만원으로 12억8800만원 감액했다. 그밖에 북한의 전염병 통제능력 향상과 보건 의료체계 개선차원에서 국제백신연구소가 추진하는 북한 백신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49만3000달러 상당을 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은 전염병 진단실험실 지원과 북한 의료인력 교육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금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적용해 온 민간단체 기금 지원 기준을 제도화하기로 정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기금 지원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기로 했다.

北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남 비난 공세

-- 11월 18일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남한 정부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8일 이명박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동족을 반대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무분별한 소동을 벌인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체제에 대한 용납못할 모독이고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며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사태 악화를 키질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특히 “결의안에 포함돼 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을 빼도록 암암리에 뒤공작”을 폈다고 주장하며 “격분”을 나타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이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족을 결코 드는 인권 소동”으로 인해 “북남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고 자주통일의 길에 보다 엄중한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을 촉구했다.

“국제기구, 북한산 의약품으로 北지원”

-- 11월 18일 조선일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구매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의료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투자회사와 북한 평양제약공장이 공동 투자해 2004년 평양에 설립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이들 국제기구 뿐 아니라 해외의 지원단체중에서도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앵트 회장은 “국제기구가 사들인 북한산 의약품은 다시 대북 의료지원에 쓰이거나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특히 북한산 의약품은 WHO의 국제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신뢰를 갖고 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해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할 때보다 운송비, 저장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북 유화 제스처...북한 호응은 ‘미지수’

-- 11월 18일 노컷뉴스

북한이 최근 판문점 적십자 연락전화를 단절시키고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잇따라 대남 강경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라 살포를 제지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나서고 민간단체의 금강산 방문을 허용하는 등 대북정책에 일부 유연성을 발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사업 지원 등 5건의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3억여원을 사용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또 17일 북한 고성지역에 연탄을 전달하기 위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관계자 4명의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11일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진상규명 및 신변안전보장 이전에는 민간단체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금강산 지역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빠라 살포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 하에 해당 단체에 자제를 촉구하던 그동안의 방침에서 벗어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빠라 살포를 제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찾고 있다. 이같은 조치들과 관련해 정부는 금강산 사건 해결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RFA “북한 정부 관리, 내년 2월 미국 방문”

-- 11월 19일 노컷뉴스

북한 정부 관리들이 미국 비정부 구호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내년 2월 중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조미민간교류협회'에 소속한 북한 정부 관리 수 명이 미국의 5개 비정부 구호 단체들의 초청으로 내년 2월 미국 동남부와 서부를 방문한다고 미국과 북한 간 식량 지원에 정통한 소식통이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비자 신청과 여행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어 북한 정부 관리들은 이 단체들의 본부가 있는 서부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와 워싱턴 주의 페더럴,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분과 블랙 마운틴, 그리고 뉴욕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북한 관리들과 미국의 식량 지원에 관련된 인사들은 미국의 식량지원이 합의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재검토해야 할 부분, 그리고 지원 기한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미민간교류협회'는 북한이 지난 2006년 미국과 비공식 대화 창구로 만든 사실상의 정부 기관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들을 상대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남북관계-양안관계 발전 속도 '역전'

-- 11월 19일 연합뉴스

남북관계와 중국 대만간 '양안관계'의 발전 속도에 역전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10년간에도 경제면에선 양안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앞서 있었으나 정치면에선 남북관계가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데 비해 양안관계는 갈등과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남한과 대만에서 비슷한 시기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정치적인 면에서도 양안관계가 후퇴 국면의 남북관계를 추월하는 양상이다.

양안관계는 정치관계의 호전을 바탕으로 경제교류.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정치관계의 후퇴에 영향을 받아 경제교류.협력도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엔 뒷걸음질 칠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양안관계는 중국이 이미 개혁·개방체제를 이룬 상태이고, 남북관계의 핵심이슈인 핵문제와 양안관계의 핵심이슈인 대만독립 문제의 성격이 다르며, 국력의 우열관계도 남북관계와 양안관계가 다른 등 구조적으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와 양안관계는 그러나 각각 북한과 중국은 정권교체 없이 남한과 대만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핵심이슈

에 대한 새 정권의 접근법에 따라 정치적 관계의 부침을 겪는 유사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하지 않겠다'는 정책에 따라 정체상태이다가 핵협상과 남북 대화의 동시진행을 주창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급속발전했지만 '핵진전에 따른 남북협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에 대한 북한측의 반발로 당국간 관계가 단절되는 등 퇴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양안관계는 '대만 독립' 노선을 고수한 천수이볜 전 총통이 물러나고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들어서면서 정치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며 남북관계를 추월하는 모습이다.

북·미 '시료채취, 3단계서 실시' 합의

-- 11월 19일 경향신문

북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의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샘플링)를 2단계(불능화)가 아닌 3단계(핵폐기)에서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합의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으며, 시료채취의 수준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지난달 1~3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 방법에 구두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시료채취는 2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시료채취 등 본격적인 검증은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 3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점을 북·미 양측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3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시료채취의 구체적 방법 등을 정하고 차기 6자회담에서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시료채취는 2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고위 당국자도 북핵 논의 쟁점에 대해 "문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지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는 시료채취 방법을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검증은 2단계 이후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MB '투입만큼 산출' 북한 문제도 경제논리

-- 11월 19일 한겨레신문

"제발 레토릭(수사)이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8일 "한·미 관계가 좋은데 북한 문제가 무슨 걱정이나"고 되풀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 직접 대화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과 엇나가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특한’ 대북관은 시이오(CEO)식 접근법과 대북 컨트롤 타워의 부재, 국내 정치 상황 등의 3요소가 빚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경제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흥정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켰듯이, 북한도 ‘경제적 대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 가스 도입 협정에 대한 낙관론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북한을 경유한 러시아 가스도입 협정이 12월에 체결될 듯하다”며 “북한이 현재 개성, 금강산으로 버는 돈이 연간 7500만 달러인데, 러시아가 가스관의 북한 통과 대가로 연간 1억10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니, 북한이 싫다고 안했다”고 그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과거 사례와 견줘보면, 지나친 ‘경제적 접근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비핵·개방 3000’에서도 이런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묻어나온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나오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대대적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 구상은, 우리가 주는 만큼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주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대북 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은 투입한 만큼의 효용을 못 거뒀으니, 이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 11월 19일 한국일보

“도대체 대북 정책의 진의가 뭔가. 최고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이 쏟아 놓는 대북 압박성 발언이 본심인가, 아니면 국방부 통일부가 12일 이후 제시한 각종 대북 유화 조치가 정부의 방향인가. 북한이 헛갈리지 않겠는가.”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의 엇박자 대북 정책 행보를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북한이 12일 남북 육로 통행 제한·차단 예고, 남북직통전화 채널 단절 등의 대남 압박을 시작한 이후 18일로 1주일이 됐다. 정부는 그 사이 각종 유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와 혼재되는가 하면 타이밍도 적절치 못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압박 다음날인 13일 오전 국방부는 북한에 전화통신문을 보내 “통신 자재·설비 제공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 달래기 성격이 짙었지만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정부의 유화 조치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17일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빠라) 살포를 막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고,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북도 허용됐다. 또 18일엔 7월 이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104억원을 각종 대북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조율된 조치들이어서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압박 조치 직후 “기다리는 것도 때론 전략”이라고 반응했다. 17일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도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몇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장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면 된다”며 북한의 조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장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과 일선 정책라인이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최고 정책결정자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北·中 변경 무역에 찬바람 ‘쌩쌩’

-- 11월 20일 연합뉴스

북중 양국의 접경도시를 통해 주로 이뤄지는 변경무역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대공보(大公報)는 18일자 신문에 민간 변경무역의 쇠퇴로 활기를 잃은 단둥(丹東), 투먼(圖們), 훈춘(琿春), 장바이(長白), 쉰허(三合) 등 접경도시의 침체된 분위기를 상세하게 전했다.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조선(북한)에서 광산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도 수입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광산물 중계무역으로 인한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 형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둥 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북한 무역일꾼들도 감소했다. 이전까지 단둥에는 북한 무역회사에서 파견한 상주인원만 200여명에 달했고 이보다 많은 숫자가 무역을 위해 단둥을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무역일꾼들의 왕래가 줄어들어 북중 변경무역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 자매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가 17일 전했다.

북중 양국을 부지런히 오갔던 운수업자들도 변경무역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일손을 놓은 형편이다.

무역업자들이 “변경무역이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통계상 북중 양국의 전반적인 교역규모는 작년보

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국의 교역규모는 16억7천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北당국도 ‘장애인 복지 개선’에 눈 돌려

-- 11월 19일 연합뉴스

19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국의 장애인관련 단체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평양 대동강구역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예술 및 체육양성 센터’를 짓는 등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14일엔 북한 내각의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과 노동성 사회보험국,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제1차 교정기구 및 연관부문 일꾼 기술실무토론회를 함남 함흥 영예군인(상이군인)교정기구공장에서 열어 장애인용 교정기구의 규격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공장은 2006년 유럽연합(EU) 보건기구의 지원을 받아 폴리프로필렌을 재료로 한 교정기구 생산라인을 설치했다.

이번 토론회는 폴리프로필렌을 재료로 한 교정기구 생산라인 설치로 제품 재질이 가죽에서 합성수지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교정기구를 규격화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북한에 주재하는 마리암 아보드 후곤 EU 협조대표부 장애인전문가와 장티앙 파베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물리치료 고문도 초대됐으며, 행사 후 이들은 이 공장과 ICRC가 지원하는 황북 송림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평양과 함북 청진 및 평북 선천의 교정기구수리 공장 등을 둘러봤다.

19일엔 북한의 장애자보호연맹이 평남 성천농아학교에서 북한 전역의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특수교육부문 일꾼 토론회’를 이를 일정으로 열었다.

北, 스위스 단체로부터 풍력발전기 지원 받아

-- 11월 19일 조선일보

북한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풍력발전에 눈을 돌리고 스위스기독교학생운동(Campus fur Christus Switzerland)측으로부터 소형 풍력발전기와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했다.

이 단체의 북한 담당자 부르크하르트씨는 “지난해부터 황해북도 황주군에 300W 규모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 각 한대를 시험적으로 설치하고 유럽의 선진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풍력 발전기가 모두 목표했던 전기 생산에 성

공하면 내년부터는 다른 지방 도시로 풍력 발전기의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3월 경에는 북한 기술자들의 유럽 연수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6년 환경법과 1998년 에너지법을 도입했고 199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하면서 재생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풍력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대북 뺨라 살포 대응 수위 높여 (종합)

-- 11월 19일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뺨라 살포에 대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은 정부 역시 이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19일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뺨라 살포에 대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할 때도 전단 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뺨라 살포에 따르는 법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절차적 문제를 들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뺨라 살포를 막아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훨씬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 역시 뺨라 살포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웨이트, 북한에 2천만 달러 차관 제공

-- 11월 20일 노컷뉴스

쿠웨이트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설립한 ‘쿠웨이트 아랍 경제개발기금’은 북한에 2천1백70 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기금은 성명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차관은 평양시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것이라면서, 사업을 통해 평양의 하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과 공중보

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기금이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북한과 쿠웨이트가 수교한 지 1년 만인 지난 2002년 3월, 평양 시 상수도 재건 사업에 2천1백7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 공사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인 지난 2007년 2월 평양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발표는 '쿠웨이트 아랍 경제개발기금' 대표단이 18일 평양에 도착한 시점에서 밝혔다.

미 지원 식량 2만5천여톤 남포항 도착

-- 11월 20일 노컷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가운데 비정부기구(NGO)에 분배할 5차 선적분 2만5천 톤이 19일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의 토빈 듀 소장은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 5차 선적분이 남포 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5차 선적분은 밀과 옥수수 총 2만5천60 톤으로, 미국의 5개 비정부 기구에서 자강도와 평안북도 지역의 노약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번 선적분 도착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전달된 식량은 총 14만 3천3백30 톤에 이르고 있으며, 6차분이 2만 5천 톤은 현재 선적에 들어가 내년 1월 북한에 도착 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앞으로 12개월에 걸쳐 총 50 만톤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다.

“제발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나 했으면”

-- 11월 20일 시사저널 996호

남북 관계가 경색 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비명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더더욱 절박함이 크게 다가온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지금 분위기는 사뭇 비장하다. 남북 관계가 경색 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북 경협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해외 바이어의 주문도 급감했고, 국내 금융계의 대출 지원은 사실상 단절되었다. 인력 수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지 공장의 분위기도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서 살짝 희망의 기운이 엿보이기도 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북한의 압박은 오히려 더 거칠어졌다. 북한 군부가 11월6일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에 실태 조사를 이유로 들이닥쳤다. 이 자리에서 군부는 개성공단 기업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12일의 입장 표명은 더 강경했다. 북한군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는 발표였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문창섭 회장은 지난 11월10일 상경해 아예 서울에 상주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경위를 파악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위기 상황을 읊소했다. 11월13일에는 김하중 통일부장관과 면담했다. 그러나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격앙되어 있었다.

익명으로 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기자에게 쏟아내는 그들의 발언 수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의 대표는 “(정부에게) 다른 것은 기대도 안 한다. 제발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달라”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등의 입장 표명이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그는 “이것은 (우리들) 서서히 죽이는 것이다. (정부는) 차라리 (개성공단) 문을 닫아라. 깨끗이 끝내자. 그러나 (국가가 우리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에 소재한 한 기업의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철수 이후 개성 쪽도 위험하다는 말들은 많았다.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할 듯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北, 오바마와의 북핵 협상 자신감”

-- 11월 21일 서울신문

4박5일 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북측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핵협상 등 북-미관계의 열쇠는 북측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측 실무 관계자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중요하다.(우리는)당당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사태 해결에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 등 지도부는 대북 전단(빠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 1일 가시화될 북측의 경고는 최후통첩과 같았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를 막아내는 것

을 보면 전단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노당측에도 섭섭함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조선사회민주당과의 면담에서는 "김영대 당 위원장이 '지난 8년간 남북관계 중 최악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면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北 위협은 대화하자는 신호’...NY타임스

-- 11월 21일 뉴시스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강경한 자세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신호로 풀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A섹션 18면 톱기사로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관광객들의 사진과 함께 "북한이 영변핵시설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중단과 개성공단 봉쇄를 시사하는 등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협상할 때는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소시지 한조각(Salami Pieces)' 전략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북한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와 시료 채취를 놓고 협상을 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타임스는 한미동맹을 교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오랫동안 구사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다시금 통미봉남의 유효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8년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정책'을 들고 평양을 방문했지만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핵프로그램 포기할 때까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던 시절을 돌이켰다.

“오바마 싱크탱크 대북특사 제안, 이제 李대통령 차례”

-- 11월 21일 파이낸셜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미국진보센터(CAP)가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두

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나 외교관계 수립 등 폭넓은 안을 담고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이제 문제는 이명박 정부"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남북문제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구경만 할 것이냐"면서 "우리는 미국이 만든 안에 통과의례로 동의만 하는 수준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CAP의 대북특사 제안은 오바마 정권인수팀이 향후 국정운영 청사진인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통해 북한과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나온 내용이다.

조용기 “MB, 대북 강경정책 당장 바꿔라”

-- 11월 22일 연합뉴스

보수 개신교계 대부적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를 포함한 보수-진보 개신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교인'이 이명박 정부에 강경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익단체들에 대해서도 대북 배라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 대강당에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신정부 선출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퍼주지 않겠다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북한 내부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본격 가동시 경제효과 작년의 7.1배”

-- 11월 21일 연합뉴스

개성공단의 1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지난해의 7.1배로 커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이영훈 연구위원이 부산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 유발효과는 5억1천만~6억7천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억7천만~2억2천만 달러로 각각 추산됐다.

이 같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전체 국민소득(9천669억달러)의 0.05~0.07%와 0.02%로 분석됐고, 고용 유발효과는 2천500~3천300명으로 집계됐다. 또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2010년에 입주계약업체 260개가 본격 가동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는 지난해의 7.1배인 36억~47억2천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억9천만~15억6천만 달러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0년 전체 국민소득(1조1천68억 달러)의 각각 0.3~0.4%와 0.1%에 해당하고, 고용 유발효과도 1만7천700~2만3천400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으로 얻는 이득도 지난해의 경우 임금소득 1천430만 달러에 그쳤으나 북한 근로자 10만 명이 고용되는 2010년이면 임금 및 조세소득이 1억~1억2천만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는 ▲수출이나 수입대체 업종을 개성공단에 진출시킬 것 ▲중국 및 베트남의 대체투자지로 개성공단 활용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개선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확대 등이 제시됐다.

“개성공단 생산 유발 2010년에 47억 달러”

-- 11월 22일 한겨레신문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2008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근로자 및 자본공급 등이 원만히 해결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년 후 개성공단의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47억2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개성공단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는 이날 부산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틀째 심포지엄에서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중국 및 베트남 쪽 투자와 달리 개성공단은 원부자재를 전적으로 남한에서 조달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이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북-일 경제관계와 개성공단에 대해 발표한 일본의 미무라 미쓰히로 동북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주임은 개성공단을 ‘남북의 귀중한 공공재’라고 부르며, 앞으로 북-일 경제교류가 다시 시작될 때 개성공단은 대북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中 89%, 남북 경색이 경영에 심각한 영향”

-- 11월 23일 연합뉴스

개성공단의 기업 대다수가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입주예정인 기업 63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8.9%가 ‘매우 심각하다’(60.3%) 또는 ‘심각하다’(28.6%)고 응답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34.9%는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발주물량이 취소되거나 수주가 곤란’(22.9%) 또는 ‘회사의 신인도가 추락’(21.1%) 등을 꼽은 회사도 많았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기업 대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54.1%)고 밝혔다. 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포기’(26.2%)하거나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중단 또는 가동을 축소’(13.1%)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또한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빼라 살포에 대해 ‘빼라살포를 중단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67.2%)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이들은 ‘당국간 대화, 기숙사 건설 등의 구체적인 이행’(34.7%)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의지 표명’(25.4%), ‘정경분리에 따른 개성공단 개발계획 정상 추진’(25.4%) 등을 꼽았다.

<종합>北 “개성공단 축소개성관광 중단남북 철도 중단”

-- 11월 24일 뉴시스

북한이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인원을 축소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이날 밝혔다. 북측은 관리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리위 직원 50%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 건설공사 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또 “100만평 경제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며 “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이어 “우리는(북측은) 남측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의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고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을 남겨두는 것으로 MDL 육로 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특히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을 중지한다”며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거래 등을 목적으로 MDL 동서에 육로를 통해 우리측(북측) 지역에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를 차단한다”고 언급,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에 모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북측은 “다만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 되는

물자와 그 운반 성원들의 하나로 건당 엄격히 검토해 처리한다"며 또 "우리측(북측) 봉동역과 남측 문산역 사이를 오가는 철도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마지막으로 "남측에서 우리의 이번 조치에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Obama's and North Korea

오바마와 북한

-- 11월 19일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출처:<http://www.cfr.org/publication/17818/>

There's a lot of speculation about how President-elect Obama will organize his administration to address a truly daunting list of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a global economic crisis, Iraq, and Afghanistan. On the list of potential crise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inherit come January 20th will be the task of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lready been considerable speculation regarding how an Obama administration will approach the North Korean issue, especially in Seoul, Tokyo, and Beijing. Much of that has tended toward the dramatic idea that Mr. Obama himself would seek an early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through personal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s.

However, given the challenges he faces, it's more likely the first task will be to choose advisors who are likely to affirm the willingness of a new administration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chart a path that addresses North Korea holistically, as both a regional security and a non-proliferation challenge, and that also seeks to utilize North Korea as an opportunity to remake a stable Korean peninsula and a stable Northeast Asia.

북핵 문제에 대한 잠재적 위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오바마가 높은 수준의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인수 후 오바마 행정부가 당면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조력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을 통해 비핵화된 북한과의 정상화된 관계를 수립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접근 가능한 조력자 그룹이 있으며 이들을 잘 조화하여 지향하는 정책을 구현해야한다. 첫 번째는 부시행정부에서 취한 그룹으로 (북미)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혼합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룹이며, 두 번째는 다자간 논의를 희생하더라도 북미 양자간의 신뢰 구축에 기반한 논의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핵을 저지함에 우선 순위를 두는 그룹으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그룹이다

Latest Threats May Mean North Korea Wants to Talk 북의 최근 위협은 대화하자는 신호

-- 11월 20일 New York Times

출처:<http://www.nytimes.com/2008/11/20/world/asia/20korea.html>

For 10 years, South Korea has pursued a "sunshine policy" as its master plan for transforming North Korea. Under that banner, South Korea funneled billions of dollars to the North for new factories, hotels and food, and millions of South Korean tourists poured across the border.

But eight months after President Lee Myung-bak came to office here promising a harder approach, the once vaunted policy has unraveled. North Korea has cut off high-level dialogue with the South. It has severed Red Cross-managed telephone "hot lines" crossing the demilitarized zone. In July, a North Korean soldier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tourist visiting its Diamond Mountain resort, leading to its closing.

The North is now threatening to shut down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Korean town of Kaesong, the best South Korea had to show for its 10 years of sunshine policy. During an inspection tour earlier this month, a high-ranking North Korean general turned to the South Korean factory owners and asked, "How soon do you think you can pack your gear and go home?"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10년의 햇빛 정책과는 달리 대북 강경기조가 제시된 10개월이 지난 현재,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 북은 최근 개성공단의 폐쇄하고 핵시료의 채취를 합의한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햇빛 정책의 종료와 함께 대외 관계의 단절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는 행동으로서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北朝鮮制裁を半年延長 国会で承認

대북제재 6개월 연장, 국회 승인

-- 11월 21일 니혼게이지자이

参院は21日午前の本会議で、北朝鮮籍船舶の入港禁止措置の来年4月13日までの再延長を自民、民主、公明各党などの賛成多数で承認した。制裁は北朝鮮の核実験などを受けて2006年に発動。外国為替法などで国会の承認が求められており、衆院はすでに承認済み。

참의원은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를 2009년 4월 13일까지 재 연장하는 조치를 자민, 민주, 공명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승인했다. 중의원은 이미 승인한 바 있다.

추천 논문

대북 농업개발협력 정책 방향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전환과 북핵문제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은 경제 분야 전반의 협력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식량차관이나 비료지원 중단이라는 결과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협력,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선행적 준비가 필요하다.

개발협력 추진에는 사전에 준비, 검토되어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았던 반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적었다. 즉, 개발협력을 추진 절차, 추진 시스템과 제도, 대상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수혜 대상인 북한에 개발협력 의사를 타진함과 함께 개발협력의 주체이자 재원을 제공하는 국민들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의 수립·재원 조달 방안·개발협력 규모에 따라 국회 등의 승인·복과의 구체적인 협정 체결·실행·감독과 평가의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추진 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체계의 확립, 식량 수급 안정화,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속에 ‘국민적 합의·남북한 합의’의

기본틀 아래 국제적 합의를 통해 국제적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도 일회성 프로젝트 단위보다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도적 지원에만 국한돼 있는 대북협력을 개발협력으로 발전시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사업을 총괄하는 통일부와 농업부문 개발협력이란 점에서 농림부와 유기적인 업무 연결과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새로운 논의보다는 후속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이 적은 분야일 뿐 아니라 남북이 필요성과 의의 등에 대해 이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서로의 의지가 협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합의된 사항 중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효율성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기존 합의의 wdtls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식을 도출하는 등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rei.re.kr/kor/info/infor01_nkview.php?cpage=1&reportid=NK0003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노동신문에서 ‘북남관계 전면차단 최악의 상태, 대북정책 근본 전환이 해법’ 강조

○ 노동신문은 24일 “북남관계의 현 위기의 원인이 명백한만큼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도 명백하다”며 “그것은 이○○ 일당이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견어치우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논평 ‘북남관계를 어디로 끌고갈 심산인가’를 통해 “이○○ 정권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이 북남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파타의 국면으로 몰아간 것은 사실상 필연적 귀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전면차단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이○○ 일당은 내외의 규탄과 공정한 여론에 도전하면서 우리와의 대결자세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발언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냐’는 언급을 지적하며 “북남관계가 더 이상 방관시 할 수 없는 최악의 위험상태에 처했는데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북남관계가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고대한다는 수작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